"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국가 농업의 신성장동력"

김희수 도의회 의장,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포함토록 정부에 결단 요청

"전북, 농생명 관련 기관 집적돼… 농업정책·금융·산업 연계 최적지"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희수 도의회 의장은 25일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되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전북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관련 연구 기관과 산업 기반이 집적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다.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농업정책과 연구·기술, 생산·유통, 금융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농·생명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은 농업 현장과 농정의 거리를 좁히고 농업인 중심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인재 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수 의장은 "농생명 연구 기관과 산업 기반이 집적된 전북에 농협중앙회가 이전한다면, 정책·금융·연구·현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균형 성장과 지역 산업 기반, 이전기관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부장관,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 직접 청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그간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전용 모기지(안)의 대출만기 및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지속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의 대출만기, 금리를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 모기지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대해 만기는 최장 40년, 고정금리 1.9~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의용소방대 운영 현안 논의

김성수 도의원,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현장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25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조촌119센터 내 회의실)에서 도내 각 시·군 연합회장단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릴레이 소통의 첫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과 건의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우선 사무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지역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설치를 위한 도 조례는 제정·시행 중이나 시·군 조례 정비가 아직 원활하지 않아 조속한 정비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상황을 고려해 사무공간 예산 지원 시 도비지원 비율을 완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다기능순찰차가 미배치된 8개 시·군에 대한 조속한 일괄 배포로 재난 대응력을 높여줄 것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도청사 소방본부의 독립적 청사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번기 및 동절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예방 순찰을 상시 체계로 전환해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위한 활동 예산 확보와 소방대원 기동복의 활동성(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받은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멀티미디어 선거 운동 허용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위탁선거에서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경제력에 따른 선거운동 격차를 막기 위해 자동 동보통신의 발송 횟수와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 법정의무교육

전주시의회가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25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최주만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온혜정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청렴연수원과 양성평등진흥원 등에 등록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집합 강의 형태로 진행됐다.

또 의회사무국 권동혁 공보팀장은 효과적인 언론홍보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5분발언 잇따라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는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1건의 건의안을 통해 교통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핵심 시정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열 의원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주문했으며, 조용수 의원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조속한 복원과 인월을 중심으로 한 남원 동부권의 체류형 관광 거점 육성을 제안했다.

양순철 의원은 생애주기 비용을 반영한 전체 상수도 공급체계의 경제성 분석과 취수원 이전 및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을 포함한 객관적인 비교 용역 추진을 요구, 전인숙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실질적인 노후 해법으로 '남원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향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출구 우측 도로의 변경된 선형.

"변경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출구 도로 선형, 사고 위험 우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지역 자동차노조, 원상복구 촉구

시 "현재 여건상 출차 지장 없어… 경찰 등과 협의 거쳐 결정

버스업계 측 의견 듣고 최종 결정… 문제 시 도로 구조 조정"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황의종)과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한국노총 조합장 임형빈)이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출구 우측 도로의 선형을 종전 상태로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가지고 전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국으로 운행하는 713대의 차량이 매일 시외버스 터미널 출구를 통해 나오고 있다"며 "대형버스가 대량으로 통행하는 특수한 도로임에도 차량 흐름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최근 BRT 공사를 통해 도로 선형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터미널 출구에서 우회전하는 구간의 도로 폭을 좁히고 인도를 기형적으로 넓히면서 우회전 차량의 운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기존 가로등을 종전 도로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넓게 돌출되면서 12.5미터나 되는 대형버스가 회전하려면 안전지대까지 물고 회전하는 등 버스 주행시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운전기사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버스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측은 "시외버스 터미널 출구 차량은 좌측에서 직진하는 일방통행 차량 때문에 평소에도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라며 "여기에 우측 인도까지 이번 공사로 인해 과다하게 돌출돼 매일 운행하는 700여대가 넘는 우회전 차량의 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를 하면서 도로 선형 변경 과정에서 해당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버스 운송업계와 운전기사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버스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측은 "전국을 운행하는 대형버스가 매일 대량으로 통행하는 구간은 차량 운행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해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오히려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도로 선형을 변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조속한 원상회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도로 형태는 버스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기형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위험과 운전 장애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종전 도로 선형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버스사업조합과 자동차노동조합은 "원상복구가 지체될수록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의 운전 애로와 사고 위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의 신속한 현장 확인과 함께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원상회복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청 버스정책과 BRT 사업 담당자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출구 인근 도로 선형 변경과 관련해 "현재 현장 여건상 버스 출차에 지장이 없으며,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버스가 터미널에서 출차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설치된 펜스와 보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버스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도로 선형은 전주시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통 흐름 분석을 실시한 뒤 관할 경찰서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자는 과거 해당 구간에서 버스 후륜 바퀴에 사람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언급하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장축의 버스 회전 반경을 고려해 도로의 라운드를 조정하고 보도 공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RT 사업의 기본 방향이 차량보다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는 '인간 중심의 도로'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제대로 사례를 들며 차량의 진입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구간은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우회전 동선을 확보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고 밝혔다.

터미널 출구의 차로가 기존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경찰과의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2개 차로에서 버스가 한 번에 가장 바깥 차로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며 "버스가 회전 과정에서 안쪽 차로까지 물고 들어갈 경우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버스 측의 과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버스가 먼저 진입한 뒤 이후 차로가 분리되는 방식으로 설계해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3개 차로에서 BRT 전용차로를 제외한 일반차로가 2개 차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 통행 여건이 과거보다 크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향후 횡단 보도가 설치되면 출퇴근 시간대 기린대로와 백제대로의 교통량이 증가하더라도 버스의 우회 및 이동 동선이 오히려 수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자는 일부에서 제기한 '차량 흐름 방해'와 '버스 회차의 어려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버스업계 측으로부터 해당 구간의 도로 선형과 차로 확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뒤 운행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도로 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속가능한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권요안 도의원, 정책 토론회

부지 등 주민이 풀기 어려운

난제에 공공 역할 강화해야

전북형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태양광 시설 설치와 참여마을 확대를 넘어 부지·전력계통·금융 등 실제 사업화 과정의 난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완주2,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전북형 사업모델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송원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올해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1차 129개, 2차 608개 등 전국 737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도 98개 마을이 참여해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 확대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실제 부지 확보와 계통접속, 금융조달을 거쳐 발전소 건설과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부지·계통 및 ESS·금융과 자부담·주민주도 운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일회성 공모지원에서 벗어나 공모 이전 준비부터 선정 이후 사업화와 장기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다현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총괄팀장은 옥천군 사례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이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교육과 협동조합 설립, 현장상담, 행정·회계 지원 등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권요안 위원장은 "이번 토론을 통해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농촌 현장의 기대가 큰 만큼, 이제는 얼마나 많은 마을을 선정하느냐보다 선정된 마을이 실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